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7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유권자의 73.7%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 투표하지 않은 이유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등의 순이었다.

■ 사전투표가 없었을 경우 투표가능 여부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에게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있었을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74.9%는 ‘투표할 수 있었다’, 25.1%는 ‘투표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사전투표가 아닌 선거일에 투표하였다면 후보자·정당 선택에 변화가 있었을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9명(91.6%)은 ‘후보자·정당 선택 모두 그대로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정당 선택 변화’ 4.4%, ‘후보자·정당 선택 모두 변화’ 2.3%, ‘후보자 선택 변화’ 1.7%

■ 투표 후보·정당 결정 시기 투표한 후보자 및 정당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1달 이상 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달 전’, ‘2주일 전’ 등의 순이었다.

또한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정당 결정시기가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비례대표 정당보다 지역구 후보자 결정시기가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한 후보자·정당 결정 시기(사전투표층, %)】

구분	사전투표일 1달 이상 전	사전투표일 1달 전	사전투표일 2주일 전	사전투표일 1주일 전	사전투표일 1~3일 전	사전투표 당일
후보자	<u>43.6</u>	19.7	17.6	11.3	5.7	2.0
정당	<u>35.4</u>	19.6	18.3	16.7	7.4	2.6

【선거일 투표한 후보자·정당 결정 시기(선거일 투표층, %)】

구분	선거일 1달 이상 전	선거일 1달 전	선거일 2주일 전	선거일 1주일 전	선거일 1~3일 전	선거일 당일
후보자	<u>33.7</u>	22.8	15.0	14.1	9.7	4.7
정당	<u>28.6</u>	19.8	18.5	17.9	10.7	4.5

■ **투표 후보·정당 선택 기준**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한 사항은 ‘소속 정당’(38.8%),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등의 순이었고,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데 고려한 사항은 ‘정당의 정책·공약’(30.8%),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후보·정당 정보 획득 경로**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정당 결정 시 정보가 ‘충분했다’가 81.1%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62.6%) 대비 18.5%p 증가하였다.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전투표 인식** 유권자의 93.1%가 사전투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0%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순서대로 각각 94.2%, 93.3%)와 비슷한 수준이다.

■ **사전투표 이유** 사전투표 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사전투표한 이유로 '편리해서'를 42.5%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8%),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4.2%) 등의 순이었다.

■ **선관위 시행 사전투표 공정성·신뢰성 강화대책 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시행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 대신 바코드로 인쇄', '수검표 실시' 등의 대책에 대하여는 유권자의 55.5%가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90.9%는 '공정성·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사전투표 주장 동의 여부** 사전투표제도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돕는다」는 주장에 89.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주장에는 85.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전투표제도는 「사전투표 후의 사퇴·단일화 등 선거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에 40.2%가 '동의한다', 2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는 20.1%가 '동의한다', 4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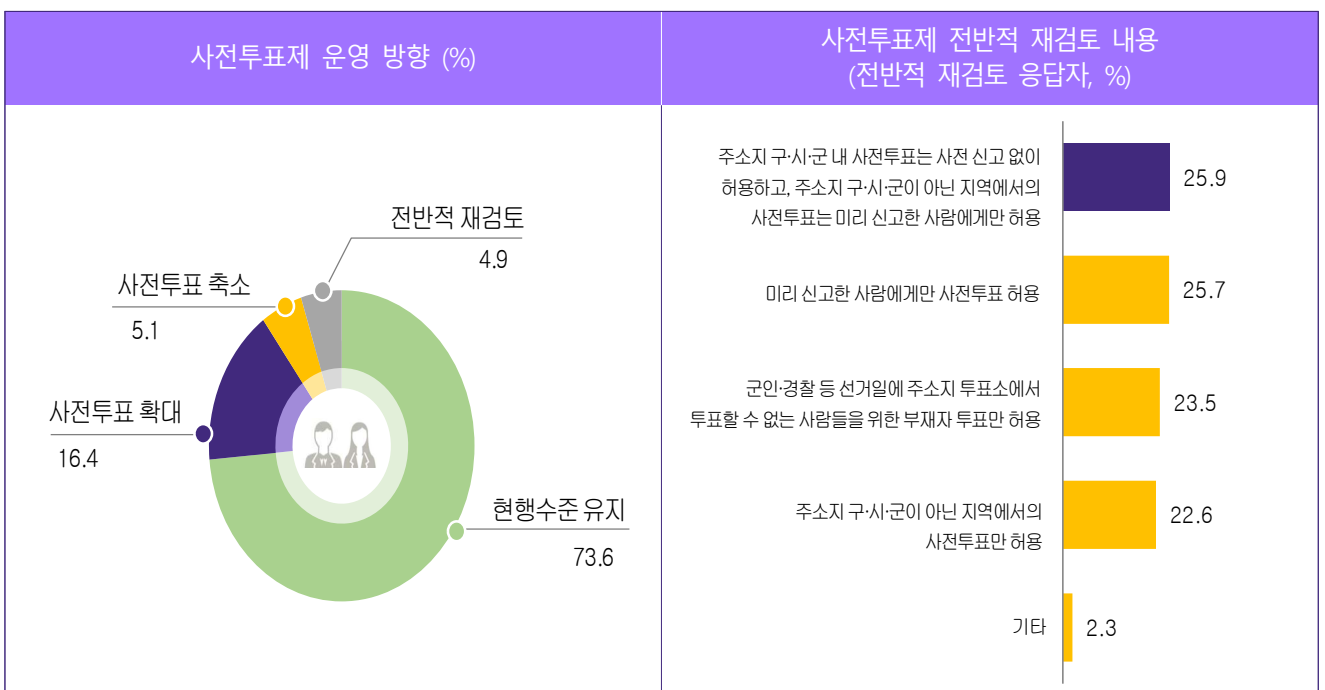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38.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사전투표 후 발생하는 후보자 사퇴, 단일화 등 선거 이슈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24.6%), '선거운동기간의 실질적 단축 및 후보자 검증시간 부족 때문에'(20.1%),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개인도장) 인쇄날인 등 사전투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5.4%) 순이었다.

■ **사전투표 운영 방향** 사전투표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7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전투표제도 확대'(16.4%), '사전투표제도 축소'(5.1%), '전반적 재검토'(4.9%)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를 '전반적 재검토'(4.9%)해야 한다고 응답한 유권자에게 재검토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가지의 보기를 제시한 결과, 4가지 보기 모두 20% 초중반대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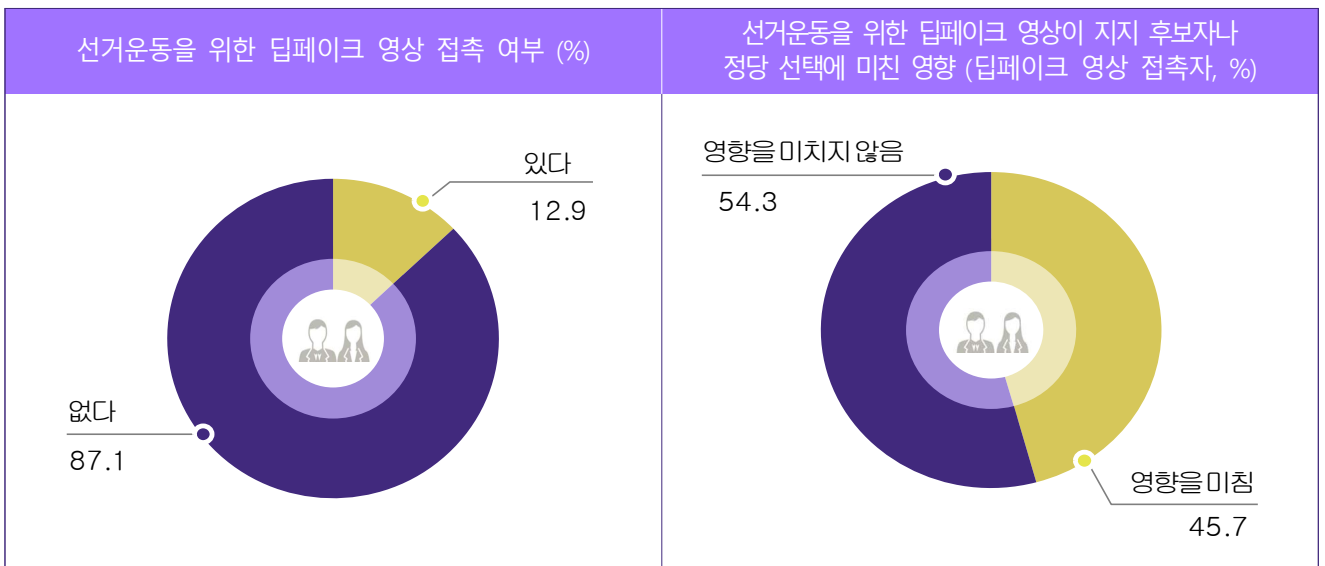
※ ①'주소지 구·시·군 내 사전투표는 사전 신고 없이 허용하고, 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25.9%) ②'미리 신고한 사람에게만 사전투표 허용'(25.7%), ③'군인·경찰 등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만 허용(23.5%), ④'주소지 구·시·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만 허용'(22.6%)



■ **투표효능감**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유권자 73.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내 한 표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4.8%가 각각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영역에서 투표 효능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사 결과(순서대로 69.9%, 68.6%, 50.2%)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 공명성 평가** 이번 선거가 깨끗했다는 평가는 60.3%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사 결과(64.7%) 대비 4.4%p 하락했다. 공명성 긍정 평가 이유로는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 향상'이 39.5%로, 부정 평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때문에'가 49.3%로 가장 높았다.

■ **딥페이크 선거영상 규율** 2023. 12. 2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규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34.9%, '몰랐다'는 응답이 65.1%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10명 중 1명(12.9%) 정도가 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접촉 경험자의 45.7%는 딥페이크 영상이 '지지 후보자나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 **선관위 활동 평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사 결과(59.1%) 보다 2.7%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38.6%)와 제8회 지방선거(52.4%)에 대비해서는 각각 23.2%p와 9.4%p 상승한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63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 p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하였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제3차) 결과 1부.